

문 대통령, 공식일정 없이 회담 총력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정구상의 시간을 보냈다.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까지 관련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에도 별도의 외부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는 18일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가다가 잡혔다. 아울러 국회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을 듣기로 한 방침을 감안, 국회 존중 취지에서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대신해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철에 즈음한 국회사정연설을 밝혔다. 이 총리는 연설 머리말에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서 추경안 시정연설 대독 미국 방문 앞두고 남북 핫라인 통화 성사 주목

게 됐다”며 추경안 통과를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생을 챙길 추경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날은 스승의 날이지만 문 대통령이 학창시절 은사와 통화를 하거나, 기념 메시지를 내용을 계획도 없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15일에는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비세먼지 바로알기 방문교실’ 행사에 참석했다. 경남고 이희훈 은사에게 스승의 날 안부 전화를 했다.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 김성욱 씨와도 통화하며 위로를 전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을 지시했고, 공무

원연금급단은 약 두 달 뒤인 7월 6일 김초원·이희훈 교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열려 ‘예비회담’ 성격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비핵화 담판’을 매끄럽게 이끌기 위한 중재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간극 좁히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판문점 선언에 담긴 ‘완전한 비핵화’ 의미와 실천방안을 설명하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 폐기를 전제로 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 합의 도출도 주요 의제다.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 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로 의견을 나눌 지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

안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를 계기로 남북 정상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미 정상회담의 ‘5월12일 싱가포르 개최’는 지난 10일 발표했다. 애초 핫라인 통화는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진행하기로 지난 달 27일 남북이 합의했지만 지연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핫라인 통화는 양측이 서로 부족한 소통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현재 핫라인 통화를 하지 않을 만큼 양측이 충분히 소통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해야 할 시점을 정해놓고 통화한다기보다 통화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통화) 가능성은 높은 듯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핫라인 통화가 이뤄졌는데 공개를 안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했는데 안했다고 속기는 것은 아니다”면서 “첫 핫라인 통화는 상징성이 강하기에 공개해야 한다고 (내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무일 총장, 권성동 의원 소환 보고하자 호된 질책”

안미현 검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관련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의정부지검 검사가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춘천지검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겠다고 보고하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크게 질책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8일 권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상부에 제출했는데, 문 총장은 이영주 춘천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연구관이 연락을 한 것에 비춰볼 때, 김우현 반부패부장도 권 의원의 소환을 저지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강원랜드 수사단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수사단은 이미 이 무렵 권 의원, 이 반부패부장 등 사 이에 다수의 전화통화가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의 신병처리 및 수사와 관련해 (강원랜드 수사단의) 장교가 이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 역시 문 총장과 관련된 지검장의 대면보고 자리에서 권 의원을

권 의원 보좌관 소환하려하자 반부패부에서 “왜 소환하나” “권 의원, 반부패부장 등 사이에 다수 전화통화 증거 확보 반부패부 압수수색 실제로는 저지돼...검찰 최고위층 관여 신병처리 지연도 문 총장과 관련 의혹...” 철저 조사 촉구

소환하려했다는 것을 크게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문 총장은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사건과 달리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소환조사를 못한다’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2월14일 수사관(안 검사실 소속)이 권 의원 보좌관의 소환 조사를 위해 보좌관과 통화를 하는데 이 통화 이후 대검 반부패부 연구관이 전화를 해 ‘대검에 먼저 보고하지 않고 권 의원 보좌관을 소환하려한 이유’를 충고했다”며 “결국 권 의원은 고사하고 권 의원의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난해 12월8일 문 총장이 이영주 춘천지검장을 심하게 질책한 것은 당시 춘천지검에 근무했던 직원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또한 대검 반부패부

안 검사는 또 지난 3월15일 강원랜드 수사단이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는 검찰 최고위 간부의 관여로 인해 저지됐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에 따르면 이날 강원랜드 수사단은 대검찰청 반부패부 연구관이 건네주는 프린트물만 받아왔으며 디지털 포렌식은 진행하지 않았다. 안 검사는 “압수수색을 저지한 것이 김 반부패부장인지 문 총장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 최고위 간부가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춘천지검에 개입과 의원의 보좌관조차 소환하지 못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에는 ▲성역 없는 수사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구조조정 지역 위해 추경안 통과해야”

이낙연 총리, 시정연설서 여야 협조 요청 “휴업으로 고용유지기업에 실수당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5월 입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예산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은 총 3조9000억원 규모로 청년 일자리 대책 2조9000억원,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 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 일자리,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수단으로서 동시에 예초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와 관련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 청년실업률은 11.6%, 체감실업률은 24%로 사실상 4명 중 1명이 실업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고용증가 억제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간 지나친 임금격차 ▲인구구조의 문제(베이비붐 세대 은퇴 전 자녀세대의 취업연령 도래) 등을 청년취업이 어려운 구조적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 총리는 “지금 상태를 방지한다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어나 청년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완료되기까지 향후 3~4년이 청년 취업난의 고비”라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내다봤다. 이어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도 다시 추경을 제안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구조조정 대신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서 지급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유급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한도를 하루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겠다”며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또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공 업종 기

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부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된 지역기업과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개척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해외은닉재산 환수’ 범정부 조사단 관심 집중... 삼각편대로

국세청 등 기관 협의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지도층들의 해외 은닉 재산과 범죄수익 환수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꾸러질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등 관련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의 설치를 예고했다. 이는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논란과 맞물려 제기되는 밀수 및 탈세 의혹 등과 관련해 재벌과 기업들의 역외탈세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조사단

은 국세청과 관세청, 검찰 ‘삼각편대’가 주축이 돼 범정부 차원 조직으로 꾸려져 조만간 출범할 전망이다. 현재 유관 부서들이 합동조사단 발족과 관련해 협의 중이며, 구체적인 운용을 조율하고 있다. 각 기관이 기존에 수행해오던 해외 은닉재산 및 범죄수익 추적·환수와 관련한 역할과 기능 등을 바탕으로 조사단의 범위와 역할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에는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에서 이와 관련해 유관 부처와 협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세청에서는 탈세 전문가인 ‘에이스급’ 내부 인력을 합동조사단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은 해외 은닉 재산에 대한 과세 처분을 하고 관세청은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며, 검찰은 이를 수사와 사법 처리로 연결

시키다”며 “각 기관이 갖는 특징과 장점이 있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해외에 은닉된 재산 및 범죄수익 환수 문제는 지난 2016년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사회적인 요구와 주목을 받아왔다. 최씨가 독일 등 해외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은 은닉자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 하고 있다. 그 연장선에서 대검찰청은 지난 2월 자금세탁 및 은닉된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했다.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등 전국 각 일선 청의 담당 검사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남 “최근 사회지도층들이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하여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새만금에 ‘강소특구’ 도입 최초 제안

새만금 개발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바른미래당)이 ‘새만금 강소특구’ 도입을 처음 제안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목 받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특화를 위한 강소특구 추진전략 정책 토론회’ 제목으로 오는 1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강소특구’라는 신개념을 새만금에 도입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소특구’란 지난 8일 공포·시행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 한 것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소·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존의 대규모 연구단지가 아닌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과 산업 그리고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념이다. 소규모·지역 맞춤형 기술·경제·행정이 혼합된 클러스터를 구축해 효율을 극대화 하자는 취지다. 발제자로 참여하는 국토연구원 강호제 박사는 “군산과 새만금 지역은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대규모 미개발 가용지인 새만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농업 및 어업과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저장, 신교통 수단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빅사이언스와 미래 지향적 첨단산업의 실험적 투자지역으로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관자인 김관영 의원은 “강소특구와 신재생에너지 관계 산업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변화에 발맞춘 미래성장 동력 도입으로 군산·전북의 지역경제 위기에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